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231
----------	-----

발의년월일 : 2007년 9월 18일

발 의 자 : 송재용 의원 외 10인

1. 주 문

-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 건의한다.

2. 제안이유

- 가.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지난 2005년 1월 법제정 당시 법안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전문가의 자문과 공청회, 각 지역과의 협의와 조율을 거쳐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범위를 '대덕연구단지 일원'으로 한정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 나. 출범 2주년을 맞은 지금 800여개의 크고 작은 연구시설과 1만 8천여 명의 고급 두뇌들이 밤을 낮삼아 연구개발에 몰두하는 등 선진한국의 신성장엔진을 목표로 꾸준히 매진하고 있음에도,
- 다. 지난 12일, 한나라당 서상기의원 등 대구·광주지역 국회의원 20명이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 라. 이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발의된 안건을 즉시 철회할 것을 150만 대전시민과 더불어 촉구함과 동시에,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촉구 건의문을 의결하여 각계에 건의하고자 함.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 촉구 건의안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대덕연구단지는 34년이라는 오랜 기간동안 수많은 과학자들을 배출하여 우리나라와 세계의 과학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이 연구단지는 2000년에는 대덕밸리로, 2005년에는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조성되는 등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1월, ‘10년내 세계 초일류 혁신클러스터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제정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발효로 출범 2주년을 맞은 대덕연구개발특구는 현재 KAIST를 비롯하여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등 800여개의 크고 작은 연구시설과 1만 8천여 명의 고급 두뇌들이 밤을 낮삼아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있어 선진한국의 신성장엔진으로 대덕특구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당초 정부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일 한나라당 서상기의원 등 대구·광주지역 국회의원 20명이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실로 개탄스러운 일로서 편협된 지역 이기주의와 지나친 정치논리에 의한 국민혈세 나눠먹기의 전형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의 확대에 관한 문제는 지난 2005년 본법 제정 당시 이미 충분한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법안심사과정에서 국가경영 전략상 선택과 집종의 차원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범위를 ‘대덕

연구단지 일원'으로 한정하고 전문가의 자문과 공청회, 각 지역과의 협의와 조율을 거쳐 결정한 사항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의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의한 것으로서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50만 대전시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저항할 것입니다.

과학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그 과학을 발전시키는 인프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0여년의 축적된 노하우와 잘 갖춰진 인프라, 우수한 성장동력 등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된 대덕연구개발특구야말로 21세기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과학의 메카임을 모두가 인정하고, 진심으로 나라의 미래를 위하고 대한민국의 과학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금번에 발의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온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07. 9. 19.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 촉구 건의안
찬 성 의 원 서 명

[illegible]

수 신 처

1. 국무총리
2. 국회의장
3.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4. 과학기술부 장관
5. 대전광역시장